

대통령실 복귀 앞둔 청와대... 상인·주민들 “기대반, 걱정반”

“당연히 기대되죠. 예전처럼 공무원들이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을 일주일 가량 앞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는 오랜만에 변화의 기류가 감돌고 있었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이라는 상징성 탓인지, 상인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과거의 기억이 함께 오르내렸다.

시장에서 한식당을 운영 중인 이임수(76·여)씨도 그중 한 명이었다. 청와대 복귀 소식을 언급하자 이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을 이었다. 시위가 걱정되지 않는다는 물음에 “시위가 청와대 복귀를 하든 안 하든 늘 있던 일”이라며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부터 용산 대통령 집무실 기능을 단계적으로 청와대로 이전 중이다. 복귀 시점이 다가오면서 청와대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발길이 늘 수 있을지 기대 섞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5년째 청와대 인근에서 한식집을 운영 중인 김광재(63·남)씨는 “대통령실이 복귀하면 비서실·경호처·경찰 인력까지 수천명이 움직이게 되고 그에 따른 낙수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은 청와대 손님이 많지 않지만, 이전을 마치고 나면 월 매출이 지금보다 5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의 가게 입구에는 ‘경찰관·청와대 근무자 할인’이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김씨는 “경찰관들 식대에 맞춰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며 “예전처럼 단체 손님이 다시 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기대만 오가는 것은 아니었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이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완료를 알릴주일 앞둔 19일, 청와대 인근 식당에 ‘경찰관, 청와대근무자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대통령실, 오는 28일 청와대 복귀 목표로 이전 막바지

“예전처럼 발길 많아질까”... 상인들 입가엔 기대감
“다시 시끄러워질까”... 주민들, 집회·교통 혼잡 우려

어졌다. 과거 청와대 인근에서 경험했던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 악취 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청운효자동에 거주 중인 강모(81·여)씨는 “(대통령 집무실이) 돌아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집회·시위가 다시 몰릴까 걱정”이라며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교통 혼잡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청운동에 20년 넘게 거주 중이라는 김유준(71·남)씨는 “소음도 문제지만 더 큰

걱정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라며 “자하문로와 청와대 앞길은 은평·일산 등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주요 퇴근로인데 막혀버리면 큰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천 명이 참여하는 집회가 수만명 시민의 퇴근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퇴근 시간대 도로 점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도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일대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다는 중년의 여성 직장인 김모

씨는 “이전에는 집회와 시위가 잦아 업무에 큰 불편을 겪었다”며 “용산 이전 후 한동안 조용해졌는데, 다시 예전 상황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특히 그는 “확성기 소음이 심했고 주말에는 집회가 몰려 주변 환경이 더 악화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경우 인근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스러워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는 이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지원시설 이전을 시작으로 각 부서·비서관실이 순차적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가안보실 등 핵심 시설은 마지막 단계에 청와대로 들어설 예정이다.

/뉴스시스

‘국정자원 화재’ 29~30일 완전 정상화... ‘전산망 장애’ 복구 3개 남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 발생한 정부 전산망 복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달 29~30일 모든 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세 달여 만에 ‘완전 정상화’될 전망이다.

21일 행정안전부와 국정자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산망 장애 시스템 총 709개 중 706개 복구가 완료돼 복구율은 99.6%를 기록하고 있다.

아직 복구되지 않은 시스템은 3개만 남은 상태로, 현재 대구센터에서 이전 복구 중인 행안부 소관의 모바일 전자정부 시스템 및 지원 서비스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이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복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옮긴 뒤 기술적인 환경의 차이로 프로그램 수정이 많아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이라며 “이달 29~30일에는 모두 복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모든 전산망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구가 완료되면 화재 발생 3개월여 만에 모든 시스템이 완전 정상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망이 모두 멈춘 이후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공무원과 전문인력 800여명을 투입해 복구에 속도를 낸 결과, 화재 발생 21일 만인 10월 17일 복구율 50%를 기록한 데 이어 35일 만인 같은 달 31일에는 90%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 11월 14일에는 대전센터에서 복구해오던 693개 시스템을 모두 복구 완료하기도 했다. 이는 당초 밝힌 목표(11월 20일)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대전센터에서 복구가 어려워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기로 한 나머지 16개 시스템은 연말을 목표로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 중 공무원 전용 내부 클라우드인

‘G-드라이브’의 경우 서비스 자체는 복구돼 현재 정상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는 정부가 직접 구축한 서비스였다면 지금은 민간에서 만든 서비스를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형태다.

G-드라이브는 외부 백업이 되지 않아 화재 당시 데이터 소실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특히 업무용 PC 저장 없이 해당 시스템에만 유일하게 정보를 보관해온 인사혁신처는 대부분의 업무 자료가 날아가기도 했다.

다만 소실된 데이터는 이미 정부가 밝힌 것처럼 끝내 복구하지 못했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각 개인별로 별도 PC 저장 등을 하지 않아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했다면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민주당 광주, 불법 당원 의혹·여성 특구로 ‘시끌’

불법 당원 모집 의혹에 중앙당-광주시당 징계 착수
여성 전략특구 지정까지 겹쳐 지역 정가 ‘반발 확산’



더불어민주당 심장부인 광주·전남 지역정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당원모집 의혹과 여성전략특구 지정 문제로 시끄럽다.

당원 모집과 관련해 징계 대상에 오른 이들은 “불법행위는 없었고 충분히 소명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성특구를 놓고도 잡음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2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은 최근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광주·전남 일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명단을 시·도당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당원모집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선출직들이 불·탈법 모집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된 데 따른 것으로 소명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단체장은 중앙당, 지방의원원은 시·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전남에선 최근 현직 군수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2년 중징계가 의결됐고, 서남권 군수 출마예정자와 광역의원 입지자에 대해서도 각각 당원 자격정지 2년과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시당도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소집, 자체 조사 결과와 당사자 소명을 토대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 정가에선 이른바 ‘F1’(당원모집책 또는 대리모집인)을 통해 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 등 ‘오염된 당원’이 모집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 주소로 당원 신청서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모두 불법 모집”이라며 “연루된 후보자들에 대해 중앙당에서

이런까지 지정되면 4회 연속, 장장 16년 간 ‘특구’로 지정되는 셈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중앙당과 지역 정치권의 온도차가 적지 않은 것 같고, 중대 결정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양새는 자칫 시스템 공전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예측가능한 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